

---

#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- 혁신 성장 디지털·미디어 동행 사회 -

---

2023. 2. 2.



방송통신위원회

# 순 서

I. 추진성과와 평가 .....	1
1. 주요 정책성과 .....	1
2. 개선 필요사항 .....	2
II. 2023년 업무 추진여건 및 방향 .....	3
1. 업무 추진여건 .....	3
2. 업무 추진방향 .....	5
III. 2023년 핵심 추진과제 .....	6
1. 디지털·미디어 혁신 성장전략 추진 .....	6
2. 미디어의 책임성 제고 .....	8
3. 디지털 이용자 보호 강화 .....	10
4. 디지털·미디어 규범 확립 .....	12
IV. 정부 공통과제 이행계획 .....	13
1. 규제혁신 .....	13
2. 청년정책 .....	13

# I. 추진성과와 평가

## 1 주요 정책성과

### □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기반 조성

- (미디어 통합법제 정책방향) OTT 등 신유형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분류체계를 수평적으로 정비하는 통합법제 정책방향(안) 마련('22.12월)
- (미디어 발전 추진체계) 미디어 혁신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'미디어 정책연구반' 및 실무조직(미디어전략기획과) 출범('22.12월)
- (OTT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) 국내 최초 '국제 OTT 포럼\*' 개최('22.11월) 및 해외 전략진출국가 시장조사\*\*('22.12월)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기반 마련

\* 국내외 전문가 약 190명이 참석하여 세계 OTT 산업의 미래와 국내 OTT 지속가능 발전 방안 논의

\*\* 해외 시장분석 : 중국, 멕시코, 브라질 / 이용행태 조사 : 미국, 대만, 인도네시아

### □ 미디어의 공공성·공정성 재정립

- (공영방송 평가체계 개선) KBS의 공영방송 역할 제고를 위한 경영평가 지침 개정\*('22.11월, KBS) 및 민영방송과 차별되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협약제도 도입방안 마련('22.12월)

\* (주요 내용) 공영미디어 및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평가 강화, 계열사 경영평가 강화 등

- (방송의 ESG 성과평가 신설) 방송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지상파 4사 및 종편PP 4사 대상 ESG 경영에 대한 방송평가 항목 신설\*('22.12월)

\* '환경·사회·투명 경영 관련 이사회 보고' 및 '환경경영 노력' 항목

- (시청점유율 산정방식 개선) 시청점유율 산정 시 활용하는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방식 등 다양화\*('22.10월 방송법 시행령, '22.12월 고시 개정)

\* 현행 ABC 협회 유료가구 부수 이외에 한국언론진흥재단 구독률도 활용 가능토록 개정

- (재난방송 접근성 확대)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 강화를 위해 수어 재난방송 확대\*('22.12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, '23.1월 국회 제출)

\* 주요 내용 :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 재난방송 시 한국수어통역 제공 의무, 지상파TV 및 종편·보도PP에 재난방송 시 한국수어통역 제공 노력 의무 부과

## □ 방송통신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및 접근권 확대

### ◆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이용자 피해지원 체계 구축('22.10.15.)

- ① (피해접수·상담) 카카오에 전담지원창구 마련 요청 및 온라인피해365센터와 연계한 피해상담 지원
- ② (피해구제) 약관 분석을 통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등 점검
- ③ (제도개선) 통신장애 피해구제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령·약관 등 제도개선 추진 중

- (온라인 피해 종합지원)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 등 체계적·종합적 지원을 위한 '온라인피해365센터' 구축·운영('22.5월~, '22년 기준 상담신청건수 640건)
- (통신장애 피해구제) 통신장애('21년 KT 인터넷 중단 등) 시 손해배상 기준 시간 단축(장애 연속3시간→2시간) 및 배상액 상향(인터넷6배·이동전화8배→10배)('22.7월 약관 개정)
- (미디어 접근권 확대) 시각·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확대\*('22.12월 장애인방송 편성고시 개정) 및 소외지역 미디어 접근성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 추가 구축('22.9월, 6대)

\*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(5% → 7%),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(30% → 25%)

## 2 개선 필요사항

- 방송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과 함께 미디어 발전전략을 수립할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 등 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은 미디어 정책 및 체계의 근본적 혁신 필요
- 방송사업자 등 전통 매체부터 디지털 플랫폼, OTT 등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신규 매체까지 디지털·미디어 전반의 책임성 담보 필요
- 진화되고 가속화되는 일상 속 방송통신 이용자 불편 신속 해소 및 체계적인 이용자 보호시스템 마련 필요
-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인 국민 피해구제를 위한 새로운 범사회적 디지털·미디어 규범체계 확립 필요

## II. 2023년 업무 추진여건 및 방향

### 1 업무 추진여건

#### □ 국민 일상과 경제의 중심이 된 디지털·미디어 플랫폼

-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전 산업 분야\*에서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

\* 미디어 콘텐츠, e커머스(쇼핑), 공유경제(부동산·차량), 블록체인(게임), 인공지능(검색) 등  
 ※ 전세계 디지털 전환 시장은 매년 약 21.1% 성장('22년 5,945억USD→'27년 1조5,489억USD, Markets and Markets, '22년) 향후 10년간 디지털 경제에서 창출된 가치의 60~70%는 플랫폼에서 발생 전망(WEF '20년, ITU '21년)

- 플랫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국가 기반 인프라로 자리 매김함에 따라 업무·여가·소비 등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\*\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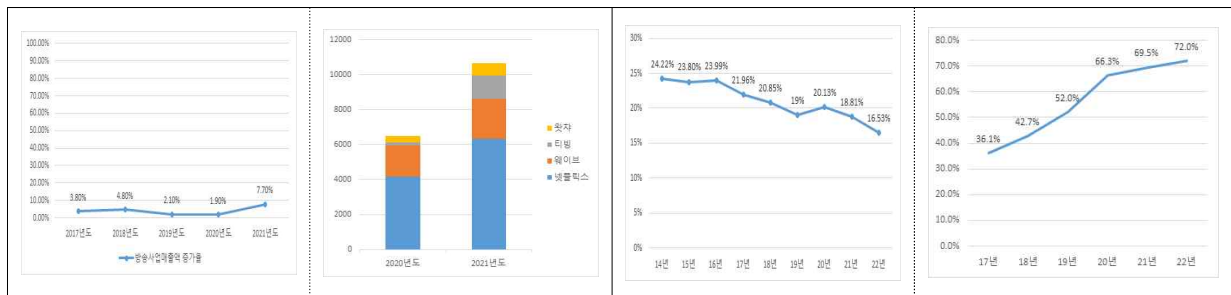
\* (앱 이용자수) 인터넷·검색 4,600만, 메신저·SNS 4,496만, OTT·음악 4,397만, 금융 4,102만, 쇼핑 3,549만(모바일인덱스 '22.6월)

\*\* 한국인의 모바일 앱 이용시간은 4.6시간/일, 쇼핑·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(Data ai, '22.3분기)

#### □ 미디어 빅블러(Big Blur)에 따른 방송통신 시장생태계 변동 심화

- 지상파·유료방송 등 전통 매체는 시장규모가 정체되고 이용률이 크게 하락한 반면, OTT 등 신유형 미디어는 빠르게 성장하며 미디어 시장에서 전통 매체의 강력한 대체재 지위 확보

< 전통매체와 OTT의 매출액 및 시청(이용) 행태 비교 >



< 방송매출액 증가율 >

< 주요 OTT 매출액 추이 >

< 주요매체 시청률 >

< 주요 OTT 이용률 >

- OTT 서비스의 급성장으로 플랫폼 간 경계가 희석\*되고,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 제공으로 치열한 글로벌 경쟁 및 전략제휴\*\* 확산

\* 하나의 콘텐츠가 방송 플랫폼과 OTT에 동시 방영 및 방송사가 직접 OTT 서비스 제공

\*\* 티빙-파라마운트 공동 투자('22.6월), 웨이브·카카오엔터 콘텐츠 공급계약('22.10월), 티빙·시즌 합병('22.12월)

- 국내 미디어 시장 내 OTT의 강한 영향력에 따라 OTT 서비스의 제도권 내 편입\* 및 진흥 기반\*\* 마련 추진

\* 부가통신역무에서 OTT 별도 분류('22.5월) \*\* 콘텐츠 세액공제 적용('23.1월), 자체 등급분류제 시행('23.3월)

## □ 디지털·미디어 산업생태계 재편에 따른 갈등·분쟁 격화

- 디지털·미디어산업 성장 및 다변화에 따라 시장경쟁이 심화되면서 재원을 둘러싼 갈등 증폭 및 다양한 유형의 분쟁 유발
  - 방송사-외주제작사-OTT사\*, 통신사-글로벌플랫폼\*\* 등 다양한 주체들 간 콘텐츠 저작권 행사, 수익배분 기준\*\*\*, 망 이용대가 지급 등 갈등 야기
    - \* '22.6월 '오징어 게임' 시즌2 제작이 결정되었으나 시즌1과 마찬가지로 IP 공유·러닝개런티 미보장 논란 등
    - \*\* 콘텐츠공급자-망사업자 간 망 이용대가 지급 관련 소송 및 찬반 논란 지속
    - \*\*\* 대형PP-통신사 간 모바일TV에 제공되는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협상 결렬 및 프로그램 공급 중단 등
- 사업자 간 과도한 수익 추구로 인한 전통매체의 공적 책무 약화 및 신규 사업자들의 사회적 책임 부족 등으로 미디어 전반의 공공성 약화

## □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 증가

-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, 알고리즘 공정성 논란 등 다양한 문제 발생
  - ※ (해외 사례)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,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(DMA)·디지털서비스법(DSA)\* 입법(EU, '22.11월),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 발의(미국, '21.6월)
  - \* (디지털시장법) 플랫폼 시장 공정경쟁 보장을 위해 대규모 플랫폼(게이트키퍼) 대상 인앱결제, 선택재업 강제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 및 위반시 세계 매출 기준 최대 20% 과징금 부과 (디지털서비스법) 이용자 보호, 사회적 책임성·투명성 보장을 위해 모든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문제·이용자 불편요인(불법 콘텐츠, 유해정보 등) 분석 및 최소화 의무 부과
- 플랫폼 의존도 확대에 따라 사회기반 인프라로서 플랫폼의 서비스 장애는 단순 불편을 넘어 경제·사회를 마비시킬 우려\*
  - \*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택시, 결제·송금 등 금융거래, 정부 민원서비스 등 장애로 전방위적인 국민 불편과 경제적 피해 유발('22.10월)
- 아울러, 인터넷 상 불법유해정보 및 디지털성범죄물 유포, 가짜뉴스 또는 허위정보 등의 무분별한 확산 등으로 이용자 피해 증가
  - ※ 사이버범죄 현황('20년 검찰처리 건수, 2021 범죄백서) : 음란물 유포 2,891건, 명예훼손 20,391건

---

◆ 우리 삶의 중심이 된 디지털·미디어의 상생과 지속성장 기반 마련

◆ 디지털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 환경 조성 필요

---

## 2 업무 추진방향

- 변화된 환경에 걸맞게 디지털·미디어의 혁신 성장을 적극 지원 하면서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규범과 윤리 기반 마련
- 디지털·미디어의 범사회적인 공적 책무를 재정립하여 공정성·투명성 제고 및 국민 신뢰 회복

비전

혁신 성장 디지털·미디어 동행 사회

구분	정책 목표	주요 업무
핵심 과제	① 디지털·미디어 혁신 성장전략 추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중장기 디지털·미디어 정책비전 설계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디어 콘텐츠 성장 자원 확충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디어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 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
	② 미디어의 책임성 제고	<input type="checkbox"/>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디어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과 동행하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재난방송 운영체계 고도화
	③ 디지털 이용자 보호 강화	<input type="checkbox"/>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 <input type="checkbox"/>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 강화 <input type="checkbox"/> 일상 속 방송통신 이용자 불편 해소 <input type="checkbox"/> 방송통신 불법유해정보 등 대응체계 정립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 <input type="checkbox"/> 산업현장 애로 개선
	④ 디지털·미디어 규범 확립	<input type="checkbox"/> 새로운 법체계 및 윤리 기반 마련
공통 과제	◆ 상시 규제혁신을 통하여 우선 추진과제 발굴·이행 ◆ 청년 미디어 리터러사·위치정보 사업화 등 디지털·미디어 분야 청년 진입지원	

### Ⅲ. 2023년 핵심 추진과제

#### ① 디지털·미디어 혁신 성장전략 추진

##### □ 중장기 디지털·미디어 정책비전 설계

- (미래지향적 미디어 통합법제) 매체별로 분산된 미디어 분류체계 정비를 통한 신·구 미디어 법체계 일관성 제고 및 장기적 성장 지원을 위해 미디어 통합법제(안) 입법 추진('23.12월)
- (우리 방송역사 정립 및 발전방향 모색) 방송역사 100년 고찰 및 미디어 미래비전 수립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(시기·내용 등 구체화 검토)
- (디지털·미디어 미래전략) 현행 방송통신정책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달라진 시장환경을 반영한 '디지털·미디어 미래 발전전략' 마련('23.하)

##### □ 미디어 콘텐츠 성장 재원 확충

- (광고 규제체계 정비)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사항은 사업자 자율로 편성할 수 있도록 '원칙 허용, 예외 금지' 체계\* 도입 검토 및 추진(방송법 개정)
  - \* 방송광고 유형 단순화(7가지 → 프로그램 내·외 광고 등 3가지)  
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일총량제 전환 등 형식규제 완화
- (분담금 제도개선) OTT 및 대형PP 사업자의 영향력 증대 등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 기준 정비 및 전반적인 제도개선 검토('23.상~)
- (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 합리성 제고) 범정부 보조금 지원체계 정비 기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·지원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('23.상)
- (수신료 투명성 강화) 공영방송 재원의 투명한 운영·관리를 위한 수신료 회계분리제도 도입 및 객관적인 수신료 산출·배분기준 마련 추진 (연중, 방송법 개정안(의원발의안) 국회 논의 지원)



## □ 미디어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

- (방송 편성규제 개편) 지상파·중편채널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(60%) 개선,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 상한(90%) 폐지,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제도 합리화 등 편성규제 개선 검토(방송법 개정안 마련)
- (소유·겸영규제 개선) 경제성장, 미디어 다변화 등을 고려, 방송사 소유규제 및 겸영규제 개선 검토 및 추진
- (OTT 해외 진출 지원) 제2회 국제 OTT 포럼 개최('23.9월) 및 국내 OTT 전략적 해외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분석·이용행태조사 대상 국가 확대 (3개국→4개국)('23.12월)

## □ 디지털 신산업 활성화 지원

- (본인확인서비스 이용 개선)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어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재외국민 대상 여권 기반 본인확인수단 마련 및 경제적 취약계층 등 대상 '전국 주민센터' I-PIN 대면발급\* 추진('23.상~)
- \* 기존 I-PIN 발급 시 대면 본인확인을 위해 본인확인기관 본사(서울)에 방문해야 하는 상황 개선
- (위치정보산업 지원) 드론·자율주행차 등 ICT 융합서비스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위치정보 중소·스타트업 대상 투자유치, 컨설팅, 교육 등 사업화 지원('23.하~)

## □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

-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미디어 혁신정책 수립을 위한 사전단계로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통위 내 미디어정책연구반 운영
- 정책연구반 활동,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토대로 미디어 발전전략과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논의할 정책 추진체계 마련('23.하)

## 2 미디어의 책임성 제고

### □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

- (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) 민영방송과 차별화되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이행점검·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제도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('23.하~)
- (공영방송 콘텐츠 제공 확대) KBS 저작권 보유 콘텐츠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확대 및 EBS 중학프리미엄 사업\*을 유료에서 무료서비스로 전환('23년~)  
\* 중학교과 주요 과목에 대한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
- (지역방송 경쟁력 강화) 지역방송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그램 제작·유통('23년 예산 45.3억원)을 지원하고 지역방송 지속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제4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\* 수립('23.12월)  
\*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매 3년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수립(제1차 '15년, 제2차 '18년, 제3차 '21년)
- (공적채널 평가) 공적운영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해당 채널의 콘텐츠 기획·제작·편성 등에 대한 평가항목 신규 개발('23.하 공적채널 평가 기본계획 수립, '24년 시범평가 수행)

### □ 미디어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

- (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추진) '23년 재허가·재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\*를 대상으로 매체별·사업자별 특성에 따라 재허가·재승인 심사를 추진하되, 방송의 공익성·공적책임 관련 심사평가 강화  
\* 지상파 : KBS, MBC, SBS, 지역MBC(13), 지역민방(7), 라디오(11) ('23.12월)  
종편·보도PP : TV조선('23.4월), MBN('23.11월)
- (포털뉴스·동영상 투명성 확보) 추천 알고리즘 투명화를 위해 기사 배열·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'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'를 법적 기구로 설치 검토 및 추진('23.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)
- (포털뉴스제휴 신뢰성 강화) 포털(네이버, 카카오)이 자율적으로 운영 중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설치·구성 요건, 역할 등 법제화 검토 및 추진('23.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)

## □ 국민과 동행하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

- (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기본법 제정)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격차 없이 미디어에 접근·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 마련('23년 법안 마련)
  - ▲장애인방송 제공 영역을 실시간에서 비실시간까지 확대, ▲소외계층 미디어 교육 시스템 구축 및 교육콘텐츠 제작 지원 근거 마련, ▲소외계층 미디어 접근 지원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등
- (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확대) 장애인방송 품질평가 모니터링단을 구성('23.상)하여 장애인방송 품질 모니터링 및 분석
  - 시각장애인용 화면해설방송 통합플랫폼 구축방안 마련 및 휴대폰·태블릿PC 등에서 음성을 자막·수어로 변환하는 시스템 개발 고도화
- (미디어 참여 인프라 확충) 지역 간 균등한 미디어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시청자미디어센터 2개 추가 구축(현재 10개 → '23년 12개, 경남·대구)
- (미디어 교육 종합계획 마련) 전국민의 미디어 접근·활용·참여 지원 및 계층·세대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범부처 (가칭)'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' 수립('23.12월)
  - ▲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 및 환류체계 확보, ▲디지털 윤리 강화, ▲디지털 격차해소 및 역기능 대응 지원, ▲미디어교육 법제도 및 민관협력체 기반 확충 등

## □ 재난방송 운영체계 고도화

- (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) 각 법률별 분산된 재난방송 체계 일원화 및 재난방송 종합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재난방송지원특별법 제정 추진 ('23.하 제정안 마련)
- (방송시설 안전점검 강화) 재난·재해 시 방송 송출 중단 사태 예방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 방송사 확대(10개 방송사 → 36개 방송사)
- (재난관리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) 재난 예보, 응급조치 및 원활한 재난방송 수행을 위해 재난관리기관 및 주요 10개 방송사(지상파·종편·보도PP)와 상시 연락체계 구축 및 재난방송협의회 활동 강화

### 3 디지털 이용자 보호 강화

#### □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마련

- (디지털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) 플랫폼 경제의 급성장 및 영향력 확대에 따른 다양한 신유형 불공정행위 및 피해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체계적·종합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
- (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) 플랫폼 혁신성장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자율체계 마련을 위해 민간 자율규제기구(시범 운영 중) 설립·지원 근거 마련(전기통신사업법 개정, 과기부 공동)

#### □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 강화

- (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대응)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에 의한 불공정행위에 대응하여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 분석\* 및 플랫폼 사업자 규제체계 정비\*\*(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마련)
  - \* 플랫폼사업자의 눈속임 마케팅(다크패턴) 등 신유형 피해 대응 등
  - \*\* 금지행위 유형에 플랫폼사업자 불공정행위 추가, 플로팅 광고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
- (단말기유통시장 건전화) 알뜰폰 사업자의 과다경품 제공, 허위·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\* 및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모니터링 강화·위법행위 상시 점검 및 조사
  - \* 알뜰폰 시장 건전화 가이드라인('23.9월), 이통시장 허위·과장광고 가이드라인('23.12월)

#### □ 일상 속 방송통신 이용자 불편 해소

- (긴급구조 사각지대 해소) 이동통신망과 호환되는 Wi-Fi 측위모듈이 미탑재되어 긴급구조를 위한 정밀 위치정보 제공이 어려운 자급제폰·유심 이동폰에 대해 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 추진
- (유료방송 해지방안 합리화) 노부모 장기입원 등으로 인한 유료방송 해지·변경신청 대리인의 제출 서류 개선\*을 통해 입원자의 민감정보 보호 및 이용자 선택권 확대
  - \* 입원사실 확인서/진단서 → 입원사실 확인서/진단서, 장기요양인정서, 요양원 입소사실확인서 중 선택

## □ 방송통신 불법유해정보 등 대응체계 정립

- (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강화) 관계기관협의회 및 민관협의회 논의 등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잊혀질 권리 보장 추진계획 마련
- (방송통신 생태계 내 아동·청소년 보호) 청소년유해매체물 온라인 광고 금지 대상 명확화, 과태료 도입 등 제도개선(정보통신망법 개정)
  - 방송출연 아동·청소년 의견수렴 의무절차 신설 및 아동·청소년 연예인 관련 종사자 대상 가이드라인 교육 실시 추진(가이드라인 개정, '23.12월)
- (디지털폭력 원스톱 피해지원체계) 온라인 상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게시물 신속 삭제·차단 및 피해보상 법률자문·분쟁조정 알선 등을 위한 디지털폭력피해구제센터 설치 추진(정보통신망법 개정)
  - ※ 온라인 정보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피해 당사자의 노력만으로 모욕적 게시물 등을 차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

## □ 디지털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

- (디지털 서비스 피해구제) 카카오 서비스 중단('22.10월) 등 디지털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이용자 고지 강화(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) 및 사업자의 과도한 면책 제한·손해배상 기준 구체화 등 약관 개선
- (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)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 현행 부가통신 서비스별\* 이용자 보호업무평가와 함께 대규모 플랫폼의 경우 서비스를 통합하여 사업자 단위로도 평가 추진
  - \* 검색·SNS·OTT·앱마켓·쇼핑·개인방송·모빌리티·중고거래·배달 등 9개 서비스
- (온라인피해지원 개선) 온라인피해구제 상담·지원 강화를 위한 온라인 피해365센터 기능 강화\* 및 유관기관 협의체 확대·재편 추진
  - \* 홈페이지 외 모바일 메신저 상담 서비스 추가, 상담사례 DB화, 홈페이지 본인인증수단 확대 등

## □ 산업현장 애로 개선

- (방송사업자 심사절차 등 간소화) 재허가·재승인 조건 부가 최소화, 재허가 심사사항 효율화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부담 완화 및 심사 효율성 제고
- (표준FM·AM 기능조정) AM청취 수요 감소, 시설 노후화 등을 고려, KBS AM라디오(27개) 중 전시·안보 및 재난매체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전국 방송망 확보 외의 방송국 기능조정 추진
- (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) 앱마켓, 신유형 플랫폼(메타버스·구인구직·부동산) 이용사업자 대상 불합리·피해 사례 실태조사 및 불공정행위 개선 검토·추진

## 4 디지털·미디어 규범 확립

### □ 필요성

- 디지털·미디어의 일상화로 방송·온라인 상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이슈가 증가하고 있으나, 관련 법령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거나 그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피해구제 및 권익 보호에 한계
- 디지털·미디어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 전반에 대한 범사회적·체계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법제도적 규범과 윤리 기반 마련 필요

### □ 주요 추진내용(안)

- 디지털·미디어 상에서 일어나는 국민 피해·불편 사항, 피해구제 관련 체계 및 법령 현황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
  - ※ '23년 정책연구, 이용자·시청자 의견수렴 포함
- 정책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여 피해구제가 미흡한 부분을 우선 보완할 수 있도록 디지털·미디어 전반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 등 마련
  - ※ (예시) 방통위,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→ 사업자, 표준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
- 디지털·미디어 상에서 발생하는 피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디지털·미디어 윤리 기반을 정립하기 위한 관련 법체계 통합 정비 등 검토

## IV. 정부 공통과제 이행계획

### 1 규제혁신

- (모빌리티 산업 활성화) 모빌리티 산업 진흥을 위해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통합하고 방발기금 지원 근거 마련 검토(위치정보법 전면 개정)
- (AM 라디오 송출중단) AM 청취수요 감소, 표준FM으로의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 휴지 중인 17개 AM라디오(MBC, SBS 등)에 대한 청취자 민원처리 내역 등을 검토 후 AM 송출중단 절차 진행('23.6월)

### 2 청년정책

- (청년 중심 미디어 리터러시 체계 구축) 청년 대상으로 미디어 분야 전문적인 교육·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미디어 연계 사회 참여 지원('23년~)
  - 대학생 대상 학점인정 교육 및 미디어 분야 특강 제공, 지역 시청자 미디어센터 내 관련 상설 강좌 개설 및 미디어 제작단\* 활동 등 지원
  - \* 시민이 직접 미디어 콘텐츠를 기획·제작하여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센터별로 구성된 모임
- (위치정보 청년 스타트업 지원) 대학생, 예비창업자 등 청년 스타트업 대상 창의적인 위치정보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
  - ※ 위치정보 활용 앱 등 서비스 분야 아이디어('23년 6개) 선정 및 앱 개발, 특허 출원, 법률 컨설팅 등 사업화에 필요한 종합 컨설팅 제공('23.7~12월)
- (청년 중소기업·소상공인 광고제작비 지원) 혁신형 중소기업·소상공인 방송광고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시 청년 기업 우대정책\* 추진
  - \* (혁신형 중소기업) 신청자격 중 중소기업 보유 인증서에 '청년친화 강소기업' 추가 및 '청년 고용 우수기업' 등에 가점, (소상공인) '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창업자' 등에 가점
- (공익광고 청년자문단 구성·운영) 창의적이고 시의성 있는 공익광고 제작·확산을 위해 '공익광고 청년자문단'(7인, KOBACO)을 구성하여 주제·확산전략 제안, 제작사 선정 심사 참관 등 활동('23.1월~)